

주요 정책 이슈

- 2013.11.5,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-

① (거시·금융) 한은,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국회 제출

- (보고서 주요내용)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건전성도 양호하나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미개선, 기업 재무건전성 저하, 은행 및 비은행의 경영건전성 저하 등 부문별 지표는 부진한 상황
 - 한은은 가계의 재무건전성 개선, 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유도, 신속한 부실기업 구조조정, 회사채시장 정상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

< 부문별 금융안정성 현황 >

- (가계) 수도권 주택시장 부진,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감소('12.하 3.8% → '13.상 1.7%)하였으나,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('12년말 136%→'13.6월말 137%)
- (기업) 수익성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(매출액영업이익률 5.7% 수준)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상위 기업의 실적개선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며, 차입금의존도가 상승(대기업 0.9%p ↑, 중소기업 0.5%p ↑)하고 단기지급여력이 하락하는 등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악화
- (금융회사) 은행 부문은 예대금리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신규 부실여신 증가로 인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경영건전성이 저하
 - 비은행 부문도 그동안의 높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증권회사와 신용카드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등 경영건전성 저하 추세를 지속
- (금융시장) '13년 들어 북핵 리스크,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금리, 주가 및 환율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
- (외환건전성) 대외여건이 개선된 데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건실한 기초경제여건,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효과 등의 영향으로 순대외채권이 증가하고, 대외지급능력이 개선되는 등 양호한 상황 지속

- (평가) 양적완화 종료 등 대외리스크와 함께, 가계부채, 기업재무구조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
 -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위기를 촉발시킬 '취약고리'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상화가 중요(서울경제, 연합뉴스)
 - 또한,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복합충격(수익성 30% 하락, 이자율 3.0%p 상승) 발생시 위험기업 비중이 글로벌위기 수준까지 재상승할 가능성(한은, 금융안정보고서)에 주목할 필요(조선일보, 머니투데이)
 - 국내 채권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국내 금리와 미국 금리 간의 상관성이 높아진 점(금융위기 전 -0.09 → 금융위기 후 +0.86) 등을 들어, 美 QE 축소시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의 위험성을 경고(삼성研)

② (정부 3.0) 산업부, 무역분야 정부 3.0사업 본격 추진

- (주요내용) 산업부-20개 수출지원기관*, “무역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(MOU)” 체결
 - * 코트라, 무보, aT, 수출입은행, 중소기업진흥공단, 전략물자관리원, 인터넷진흥원, 콘텐츠진흥원, 산업기술시험원, 생산기술연구원, 무역협회, 자동차산업협회, 중기중앙회, 상사중재원, 기계산업진흥회, 관세무역개발원, EC21, 주간무역, Frost&Sullivan, 외환은행 등
-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의 전문화된 무역정보를 국가별, 품목별로 분류하여 '14년도부터 업체들에게 제공할 계획
- 중기청의 해외시장조달·규격 정보, 코트라의 해외시장진출인콰이어리 정보, 무역협회의 무역통계보고서, 중소기업중앙회의 국가경제시장개척단 정보 등 연계 예정
- (평가 및 과제) 해외시장과 관련한 양질의 최신정보와 사업기회 제공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진출지원 포털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추진 필요(제2차 자문회의, '13.8)

③ (창조경제 정책) 「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」 수립

- (주요내용) 중기청, 기재부, 미래부, 법무부, 금융위 등 5개부처 공동으로 건강한 재도전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'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' 발표
 - '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'을 위한 다각적인 저해요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의 창업 기피*와 재도전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**은 여전
 - * 벤처기업 석·박사 창업비율(%) : ('09) 31.7 → ('10) 28.6 → ('12) 26.3
 - ** 사회적 편견 및 부실책임 우려에 따른 소극적 지원, 차별적 제도·관행 등
-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의 단계적 확대, 기업실패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, 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연계지원, 오디션 방송·컨퍼런스 등을 통한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 추진
- (평가 및 과제) 재도전 안전망 구축은 실패부담 완화를 위한 법·제도 개선 및 각종 지원과 함께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성공하는 사례를 꾸준히 발굴·확산시킬 필요
 - * 현대경제연구원의 '창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('13.10)'에 따르면 응답자의 75%가 우리사회를 '실패할 경우 재기가 어려운 사회'로, 92%는 '창업실패는 개인파산을 의미한다'고 인식
- 재도전 지원 시 창조적 실패와 진짜 실패를 엄밀히 구분할 필요(디지털타임즈)
- 연대보증 면제 조치가 정책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간금융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완 필요(동아일보)

<참고> 실패한 기업을 인수하는 야후의 전략('13.9.6, 조선비즈)

- ※ 12.7월 취임한 야후 마리사메이어(Marissa Mayer, 38) 최고경영자의 외부 고급인재 수혈과 실패경험 흡수를 위해 실패한 벤처기업들을 포함하여 1년 간 22개의 기술벤처를 인수
- ※ 8월에는 2년 2개월 만에 야후가 구글을 누르고 미국 방문자 수 순위에서 1위에 올라 전문가들은 메이어의 인수·합병전략이 야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